

1999년 노사관계 전망

이병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내년의 노사관계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 진영이 어떻게 정비되어 나갈 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그 향후 향방이 좌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상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주·객관의 상황이 더더욱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만큼, 한치 앞을 예단하고 전망하기가 실로 어렵다

1. 1998년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998년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추진에 의해 조성되어진 환경 하에서 전연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올해의 노사관계를 개관하여 볼 때, 그 특징적인 양상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공방, 노조의 양보 교섭, 노조 조직규모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와중에 실로 다사다난하게 전개되어진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적인 측면들에 대해 차례로 간추려 살펴보기로 하겠다.

1) 1기와 2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지난 해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는 당시의 긴박한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 정책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월 15일에 출범하여 26일 동안 짧게 활동하였던 1기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 선언문」과 90개 합의사항 및 21개 2차 협의

과제를 포함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하였다. 특히, 2월 6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부와 경영측은 IMF와의 협약사항이었던 고용조정(정리해고) 관련 법제 개정과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을 관철하였던 반면, 노동계는 그 보상으로 실업대책 재원 확대(5조원),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에 대한 지자체로의 이관 등을 일제하였다.

사회협약 체결 직후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하에서도 내년 한해 동안(과거의 고도 성장시기에서와 같은) 호경기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실업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율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제한받게 될 것으로 손쉽게 예상하게 된다.

합의 사항 및 절차에 대한 노동계(특히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1기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노·정간의 대립국면이 유지됨에 따라 공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5월 말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이 6월 5일에 현안문제들에 대해 정부와의 전격 협의를 이룸으로써 6월 초부터 2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화되었다. 6월중에 내부

운영체계를 새로이 정비한 2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측의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6월말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와 '금융산업 발전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에 대한 노동계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라 7월초부터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 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7월 10일에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을 항의하며, 양 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게 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한동안 공전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7월 22~23일 동안 또 한차례의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노정간의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7월 27일에 양노총 위원장과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간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까스로 노사정위원회는 복원·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7월말에 어려운 고비를 넘긴 노사정위원회는 8월초 이후 1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및

추진방안을 다루기 위한 4개 소위('경제개혁', '고용실업대책', '노사관계', '사회보장')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소위 활동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주요 현안 의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10월중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허용', '실업자의 초기단위노조 가입 허용' 그리고 '공공자금의 의무기탁 조항 개정' 등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한 정부에 의해 노·사·정 대표간의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새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한편으로 년 초의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과정에 수반되는 노사관계 갈등 요인의 최소화, 그리고 중앙 차원의 노사정 협상풍토 확립



11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11월 25일 노동자대회' 주제를 모은 3만5천여 노동자, 시민, 학생, 교직원들이 모인 모습이다.

을 통해 나름대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의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노동운동의 저항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재벌개혁 등의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해 일부 참여 주체의 반발과 정부의 합의 이행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사정위원회의 '둘러리론'과 같은 비판적인 주장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고용조정 관련 노사정 분쟁

올해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고용조정'이었다. 실제, 금년 초이래 5대 재벌그룹은 6만3천명에 대한 인력 감축(9월말 현재)을 실시하였으며, 은행·보험·증권업 등의 금융권에서도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정책에 따라 4만5천명에 대한 인원정리(8월말 현재)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기업 및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에서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5만3천명(10월말 현재)을 감축하였다. 고용조정의 실태는 노사단체의 취

올해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고용조정'이었다. 실제, 금년 초이래 5대 재벌그룹은 6만3천명에 대한 인력 감축(9월말 현재)을 실시하였으며, 은행·보험·증권업 등의 금융권에서도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정책에 따라 4만5천명에 대한 인원 정리(8월말 현재)를 추진하였다.

근 조사를 통해서 역시 드러나는 바, 한국노총에 의해 9~10월중에 실시된 산하 218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조사 사업장의 78.8%가 인력감축을 경험하였으며, 개별사업장에 있어 평균 210명의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상공회의소에 의한 회원사 조사에 따르면 69.7%가 인력감축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기할 점으로 인력감축의 방식에 있어 정리해고를 실시한 비중이 이들 조사(한국노총 14.9%; 상공회의소 11.6%)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범하게 전개되어진 고용조정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 경제부문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진행된 것이긴 하겠으나, 정부 또는 경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를 둘러싼 노사분쟁이 빈발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수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사분규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 분규의 상당수가 고용조정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올해 심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고용조정 관련 쟁의사례로

는 5개 퇴출은행(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에서와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은행권 구조조정정책 일환으로 퇴출 결정된 이들 5개 은행의 노조는 조합원의 재고용보장과 생계안정을 요구하며 격렬한 집단행동을 보였다. 또한, 민간 대기업에서의 첫 정리해고 실시를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자동차에서의 노사 분쟁은 2개월에 걸친 장기화된 분규사태를 초래하면서 고용조정과 관련된 노사대립의 정점을 이루기도 하였다.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하여 고용조정 관련 대응정책 기조를 기존의 '정리해고 철폐투쟁' 으로부터 '대책 있는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최소화'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 사태는 정치권과 정부의 중재에 의해 그 이상의 파국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직후 이들의 중재활동에 대한 다수 언론의 비판이 집중됨에 따라 여타 사업장 - 이를테면, 만도기계

와 조폐공사 - 에서의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경대응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하여 9개 조건부 승인은행에서와 공공부문에서의 노사 또는 노정 갈등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상을 거쳐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고용조정과 더불어 올해 노사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들 수 있다. 지난 년 말 외환 위기 발발 이래 임금체불,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 빈발하게 된 사용자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들로부터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 많은 분규를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용조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하여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잦아지면서 금년 들어 노동조합활동 관련 사법 조치 대상자(10월말 현재 구속 158명, 수배 57명)가 크게 늘며 노·사·정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표 1) 노사분규 발생 추이

연도	발생건수	분규 참가자(천명)	노동손실일(천일)
1990	322	134	4,487
1991	234	175	3,271
1992	235	105	1,528
1993	144	109	1,308
1994	121	104	1,484
1995	88	50	393
1996	85	79	893
1997	78	44	445
1998.11.24 현재	118	129	1,264

출처 1998년 KLI노동통계 및 노동부 자료

3) 노조의 양보 교섭

올해의 단체교섭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노조의 양보교섭이 광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총이 10월중에 1,30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임금조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하향조정 한 기업체가 54.5%, 임금동결(정기 승급/승진 동결 포함)을 실시한 기업체가 34.6%에 달한 반면, 임금을 상향조정한 기업체는 단지 11%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올해의 타결 임금인

상율(통상임금기준, 종업원수 가중평균)이 -0.5%로 사상 첫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주로 상여금 반납 방식으로 이루어진) 임금 반납분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총의 조사결과에 드러나는 양보교섭의 추세는 정부의 공식 임금 통계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바, 98년 6월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5.9% 감소하였으며(특별급여 및 초과급여는 각각 23.2%, 17.4% 감소), 실질임금의 경우에는 12.4%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조의 양보교섭은 당면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인건비 절감 요구를 노조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이루어졌으나, 상당수의 노동조합들은 임금에 대한

연말까지 양 노총에 있어 추가적인 조직 규모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손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해에 이어 노동조합원의 총수에 있어 상당 규모의 감소를 내다 보게 되며,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는 11% 안팎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양보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제 앞의 경총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임금에 대한 양보교섭과 연계하여 고용보장을 요구한 경우가 전체의 46.6%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다만, 위의 조사에서는 노조의 고용안정협약 체결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37.8% 만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올해의 교섭양상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으로 연초에 임·단협에 대한 조기 타결을 이룬 사업체 중 일부(예: 만도기계와 대우전자 등)에서는 올 하반기에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사측이 노조에게 추가적인 양보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산별차원의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주된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민주노총계열 전국금속연맹이 추진한 첫 중앙교섭의 시도는 사용자측의 거부로 기업별 교섭체계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4) 노조 조직률의 계속되는 감소 추세

상당 규모의 인력감축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공공부문, 민간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는 만

[표 2] 양대 노총 조합원 변동 추이

(단위: 명)

한국노총	931,234(97년 12월)	918,171(98년 3월)	897,172(98년 6월)
민주노총	525,325(97년 5월)	535,203(98년 4월)	508,200(98년 8월)

[표 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연도	노동조합원 규모(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1989	1,932	19.8
1990	1,887	18.4
1991	1,803	17.2
1992	1,735	16.4
1993	1,667	15.6
1994	1,659	14.5
1995	1,615	13.8
1996	1,599	13.3
1997	1,484	12.2

출처: 1998년 KLIIS-동통제 및 노동부 자료 - 노동부 집계방식

컴, 이들 부문을
주된 조직 기반으
로 하고 있는 노동
조합들은 상당한
조합원 감소를 경
험하게 되었다.
[표 2]에서 나타
나듯이, 조합원의
규모에서 한국노

총의 경우에는 97년 12월~98년 6월 기
간동안에 3만 4천명이, 그리고 민주노총
의 경우에는 98년 4월을 정점으로 하여
올 8월까지 2만 7천명이 각각 감소하였
다. 올 6월 또는 8월 이후에 계속되는 경
제 각부문의 구조조정을 고려할 때, 연말
까지 양 노총에 있어 추가적인 조직 규모
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손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에 이어 노동조합원
의 총수에 있어 상당 규모의 감소를 내다
보게 되며,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는 11%
안팎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 조직규모의 감소는 노동운동진영
내부에 폭넓은 위기감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노총에게는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특히 산하
단위노조의 저조한 멤버 납부율과 함께
멤버 부담 조합원 수의 감소로 인해 이들

노총 및 산별연맹들은 재정운용상의 심
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조 조직규모가 전반적으
로 감소되는 가운데, 그 동안 생산직 위
주의 노조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던 사무
직 계층중심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
조정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 결
성의 추진이 일부 기업(예: 대우그룹 계
열기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업
자들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들이 추진됨에
따라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 16
개의 실업자단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들 단체들은 수 차례의 공동 집회 및 가
두시위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의 주도 하에 <전국실업운
동단체연석회의>라는 전국적인 연대 체
계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노사정위
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허

용이 합의됨에 따라 한국노동총도 '전국실업자연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업자의 조직화에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2. 1999년 노사관계의 전망

내년의 노사관계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 진영이 어떻게 정비되어 나갈 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그 향후 향방이 좌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상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주·객관의 상황이 더 더욱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만큼, 한치 앞을 예단하고 전망하기가 실로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내년의 노사관계에 주요하게 영향 미칠 주·객관적인 변수의 설정을 통해 여러 가설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하며, 특히 이들 변수들이 노사관계의 향후 전개양상에 있어 구심으로 작용할지('안정화') 아니면 원심으로 작용할지('불안정화')에 대해 간단히 맥짚어 보도록 하겠다.

1) 객관적인 환경변수

정치적 변수

내년의 노사관계 향방에 주요하게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환경변수로 정치적 상황 전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① 단기로는 노동계의 숙원 요구이자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교원노조의 노조결성권'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허용'이 정기국회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노·정간의 관계,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국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무산될 경우에는 노·정간의 신뢰 개선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해서든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든 노사정 합의사항의 법제화가 그 내용에 있어 변질되거나 아예 무산될 경우에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적잖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환경변수로 정치적 상황 전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① 단기로는 노동계의 숙원 요구이자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 사항인 '교원노조의 노조결성권'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허용'이 정기국회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노·정간의 관계,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국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에 따라 무산될 경우에는 노·정간의 신뢰 개선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에 의해서든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든 노사정 합의사항의 법제화가 그 내용에 있어 변질되거나 아예 무산될 경우에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상당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향후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적잖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역시 단기로 정부에 의한 재벌개혁 및 경제청문회의 추진 결과가 역시 정부와 노동계를 위시한 시민운동단체와의 향후 상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경제청문회를 통해 얼마만큼 제대로 IMF 경제위기의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적절한 문책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연말까지로 예정된 재벌 개혁이 어떠한 강도로 추진되는가에 따라 현 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노동계를 포함하는 국민 전반의 신뢰 확보 여부(역으로는 재계와의 긴장관계 조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경제개혁의 최후 과제라 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청문회를 예정대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경우에는 노동계로부터 그 추진 과정에의 호응이나 이후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계와 정부와의 긴장 갈등관계가 크게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재계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케 된다)

③ 중기적으로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 창출의 정치적 담보가 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내년 말 예정)문제가 정치권과 사회 여론 일반에 전면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는 내년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를테면,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복잡한 세력 다툼이나 정계개편이 전개되어 현 정부의 집권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경우에는 노사관계의 구도를 이완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덧붙여 남북한 관계가 노사관계에 간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특히 남북한 간의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긴장관계 조성은 노동계에 대한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변수

두 번째의 환경변수로서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에서도 우리 경제가 현재의 불황국면에서 과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 관심이 두어진다 하겠다. 최근 정부의 경기 전망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올라서게 될지 아니면, 경제 구조개혁에의 차질을 빚거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이러한 경제회복 기간이 더욱 장기화하게 될 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점치기가 힘들다고 하겠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하에서도 내년 한해 동안 (과거의 고도 성장시기에 서와 같은) 호경기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실업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제한받게 될 것으로 손쉽게 예상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 전망치 이상으로 경기 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80년대 중반의 미국에서와 같이) 노조의 "양보회수(give-back)교섭- 불경기

기간동안 임금 양보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임금 요구협상"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수

세 번째의 환경 변수로는 사회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초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이미 대량으로 발생된 실업자 군중에서 한계생존상황에 처하게 된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적인 불만세력으로 집단화되어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취약 실업계층이 실제 집단 세력화 하는가의 여부는, 중요하게는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동절기 실업 및 생활안정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준비되는가에 따라,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이들 계층을 조직화하려는 노동계 내부의 움직임에 좌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올해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미 부익부빈익빈의 소득 불균형 증대가 나타나고 있듯이 내연에도 이러한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이반 심리가 확대되어 간접적이거나 노사관계에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 조직 내부의 조직 결속과 정책전문성 강화 그리고 양 노총간의 공조관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계는 중앙 차원이나 개별 단위사업장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더욱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노동조합 내부의 주체적인 변수

① 양 노총 및 금속산업 연맹 선거

내년의 노사관계 향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변수는 내년 2~3월에 실시 예정인 양대 노총 위원장의 선거와 민주노총 산

하 금속산업연맹의 위원장 선거라고 할 수 있다(단,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선거공약에서 밝힌 대로 현 이갑승위원장이 1년 임기로 사퇴한다는 전제 위에서 포함 시킴).

양대 노총 및 금속연맹의 위원장 선거는 우리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 갈 핵심적인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약화된 노동조합 전반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양대 노총의 중앙 지도부와 단위 노조간부 및 현장조합원간에 조성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상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노동계 전반의 협상력 강화 또는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노조 조직 내부의 조직 결속과 정책전문성 강화 그리고 양 노총간의 공조관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계는 중

양 차원이나 개별 단위사업장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더욱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조직 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

둘째, 올해까지의 노조조직 감소추세(그리고 재정 압박)가 계속됨에 따라 기존 군소 산별 연맹간의 통합 시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미, 민주노총계열의 공공연맹-공익노련-민주철도노련, 민주화학-민주섬유, 민주관광-상업연맹, 건설노련-전일노협,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 등이 조직통합 논의를 적극 진행하는 만큼, 이들 중심으로 연맹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조직 및 교섭체계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문제 제기가 더욱 공감대를 얻게 됨에 따라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산별 또는 업종별 교섭체계의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올해의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시도하였던 중앙교섭에서 같이 사용자측의 수용의사와 관계없이 노동계에 의한 일방적인 교섭 요청이 되풀이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③ 교원노조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셋째, 교원 노조의 결성(1998년 7월)

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1998년 2월)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는 이들 부문의 노동단체 조직화는 그 동안 계속되는 조직 감소추세에 의해 침체상황에 놓여 있던 노동계 내부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부문에서는 새로이 부여되는 교섭권 또는 협의권의 합법적인 행사에 있어 마찬가지로 교섭/협의 경험이 없는 사용자측(주로 정부)과의 일정기간 진통 어린 학습과정이 수반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실업자노조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에도 조직체계, 활동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일정한 자체 정립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④ 민주노총의 실질적 합법화

끝으로,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대한 제약조건들이 거의 풀려지게 됨에 따라 내년 중 민주노총에 대한 설립인가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민주노총의 제도 내적 역할이 더욱 폭넓게 증대되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